



본회의장 가로막은 자유한국당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 여야, 드루킹 특검법 처리 합의

# 추경안도 동시에... 국회 정상화 국면

여야가 14일 드루킹 특검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에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42일 간 파행을 이어오던 국회도 정상화 국면을 맞았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 단위 연례 회동을 이어온 끝에 오는 18일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의 사퇴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날 여야 합의가 나오기까지 국회는 숨 가쁘게 돌아갔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4시 본회의를 소집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총력 저지를 예고한 상황이었다.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본회의 예정시간을 30여분 앞둔 오후 3시30분께부터 본회의장 앞에 진출을 시도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했다. 다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장 정문을 우회해 좌측 문으로 입장하면서 실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강경 대처 분위기 속에서도 불밀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진행된 여야 4당 원내대표 정례회장은 물론, 여야 원내지도부는 각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단위로 연례 접촉하며 합의 도출에

지선 출마 의원 사퇴 처리 통과 이후 지방선거 총력 특검 수사범위는 불법 여론조작·자금 행위 등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및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내 '민주평화당파' 비례대표 의원들 및 무소속 의원 등으로 재적의원 과반의 정족수(146명)가 채워지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도 표결이 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표결 강행 대신 여야 원내대표를 재차 의장실로 불러 막판 협상을 이어갔고, 결국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 시각을 1시간40분여 넘긴 오후 6시40분께 여야는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여야는 지난달 2일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로테이션 집회 등으로 시작된 국회 파행 사태를 42일 만에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여야가 입은 상처도 적지 않다.

여당 입장에선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되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도 국회에 발이 묶여 장기 표류하며 국정

지원에 차질을 빚었다.

아울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9일간 단식 농성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이어지던 여야 원내대표들의 불밀 접촉마저 한때 '완전 중단' 되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원내사태팀이었던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양금을 남긴 채 임기를 마쳐야 했다.

국회 파행 기간 동안 여야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야당이 특검 대상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여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 분위기가 일었고, 여야가 '대선 불복'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아울러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을 두고 "드러누웠다", "막가파식 인식"이라고 서로 비난전을 펼쳤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단식 3일째 되던 날 30대 남성에게 국회 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는 동안 목적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남북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로 굳어졌다. 아울러 여야 대치로 4, 5월 국회가 연이어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청와대 국

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세비 반납 청원이 쇄도하는 등 국회 불신도 깊어졌다.

여야는 일단 오는 18일 특검안과 추경을 동시 통과하기로 한 만큼 추경안 심사에 집중할 뉘 특검-추경 통과 이후부터는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단 4일 만에 추경안 심사를 완료하는 데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

한편, 여야는 특검법안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뉴스

## “해외소득·역외탈세 국민 분노… 반드시 근절”

문 대통령 “검찰, 범죄수익 해외닉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제기되고 있는 밀수·탈세 의혹에 대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에 걸쳐 있고 건문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국제청문세정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

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이 건의 경우 지난달 1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해외재산의 환수, 국부유출 방지책 등에 대해서 총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사회지도층의 탈세와 국부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부기관이 개별적으로 하기 보다는 국제청·관세청·검찰이 합동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그룹 탈세 의혹 부분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하는가”라는 질문에 “특정 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현재 국제청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외닉 재산의 환수의 경우 기업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전 정권도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엔 “그냥 기업과 개인”이라고만 했다. /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완영(경북 고령·고령·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여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정치자금법, 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형사범죄의 경우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며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14일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이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의회 A의원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고 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고 자신에 대한 고소사실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A 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A의원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은 허위사실이라며 A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가르침도, 사랑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걸.

칭찬도, 꾸지람도  
바른길 가라는 격려의 말씀이라는 걸.

당신은  
우리들 마음속  
영원한 선생님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모든 선생님들께  
활짝 핀 카네이션을 바칩니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RELATIONSHIP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